"신군부가 민주주의 짓밟은 옛 도청 '언론 검열관실' 복원을"

광주·전남언론인회, 옛 도청 복원 전시 콘텐츠 설명회서 주장 복원추진단 "추모공간·시민군 지프차 등 설치…내년 12월 개관"

원형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에 '언론 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전남언론인회는 26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 딩245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안) 공개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북계엄분소 언론검열관실은 1979년 10·26 군사반란 이후 계엄령에 따라 옛 전남도청 별관 2 층에 설치됐다.

5·18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사전 차단했으며, 검 열관실에는 소령, 대위, 중위 등 5명의 장교와 보 안대 출신 상사가 상주하며 언론 보도를 사전 검열

이에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놓는다'는 내용의 공동사표를 냈고, 5월 21일부터 10일 동안 광주일보 발행이 중단되면서 호남 언론의 기능이 전면 마비됐다.

계엄군은 6월 2일이후 발행된 광주일보의 '아 광

주여', '민주시민의 긍지. 무등산은 알고 있다' 등 기사에는 빨간 사인펜을 긋는 검열을 통해 기사 내 용 대부분을 삭제할 것을 강요했다.

김성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은 "옛 전남도청의 언론검열관실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언론 통제의 현 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이 공간을 복원해 신군부가 위력으로 사실보도를 막고 민주주의를 저 해한 현장을 남기고 역사적,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장에서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의 현황과 전시 콘텐츠 설치 세부계획도 공개됐다.

전시 주제는 '최후 항쟁,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로 정해졌다.

도청 본관에는 원형복원 전시실, 검증 서사 전시실 등이 조성된다. 무장 항쟁, 최후 항쟁, 계엄군 탄두, 희생자 이야기 등이 전시된다. 외부에는 시민군기동타격대가 사용한 지프차 등도 설치돼 방문객이 직접 탑승해 볼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도청 회의실은 열린 도서관, 회의실 등으로 구성 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하 시민군 무기고 도 복원된다. 강당에는 김동수·윤상원 열사 추모 공 간도 만든다.

도경찰국 본관에는 5·18을 주제로 한 입체영상 콘텐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3층에는 수장고 시설도 설치된다.

도경찰국 민원실에는 특별 전시실과 문화예술 감 상실 등을 설치하며 관람객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 아·뮤지엄숍도 조성할 방침이다.

도청 별관은 교육 및 계승·체험 공간으로 역사 전 시실, 교육·체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이곳 2층 에는 전남도청 건축 과정과 행정 중심지로서 광주 시 신축·확장 과정,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변모 과정 등을 소개하는 건축역사실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군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에는 상설 추모 공간이 들어선다.

총 관람시간은 2시간이며 한번에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했으며, 완공 시 점은 오는 2025년 9월이다. 지난 23일 기준 공정률 은 26.9%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까지는 전시콘텐츠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며, 내년 10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마치고 12월까지 개관할 계획이다.



박태훈 문화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콘텐츠팀장이 26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옛전 남도청 전시콘텐츠 공개설명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다"며 "광주 시민이 수호한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 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6.6개월' 광주지법 1심 선고 소요기간 '전국 네번째'로 길다

법관 충원 등 고른 배분으로 지역 간 소송 불평등 없애야

광주지방법원이 민사 소송을 접수한 후 1심 선고 를 내리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6.6개월로 전국에 서 네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1심 선고 평균 소요 기간은 6.6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5.8개월)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

(7.1), 춘천지법(6.9)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재판 기간이 긴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의 평균 선고 기간은 2021년 5.8개월, 2022년 6.2개월, 2023년 6.6개월로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지방법원은 재판 기간이 짧지만 지방은 지방법원의 경우 재판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 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이었으며 서울남 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 (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 (5.8) 순으로 재판 기간이 짧았다.

법원별 재판 기간에 편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법관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박 의원 분석이다. 상 대적으로 법관 수가 적은 지방 법원에서 재판 지연 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 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 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 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iyou@

광주·전남 마약사범 10년 새 8.6배 증가

지난해 1193명 달해

광주·전남 마약사범이 최근 10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사하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4804명이다.

광주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53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0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사이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남 역시 2013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86명이었 지만, 2023년에는 463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간의 수치만 살펴 봐도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광주는 2019년 244명, 2020년 306명, 2021년 153명, 2022년 241명, 2023년 740명으로 특히 지난해 크게 늘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219명, 2020년 280명, 2021년 232명, 2022년 344명, 2023년 463명으로 꾸준히 상승세다.

10년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검거자 비중은 각각 4.2%, 2.6%였다.

10대 마약사범 검거 증가율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43 명에서 지난해 1066명으로 24.7배 폭증했다. 20 대가 8.4배, 30대가 2.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압도적인 증가다. /장혜원 기자 hey1@

한방 침 놓고 2시간 방치로 환자 마비 "주치의·원장 공동책임"

광주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환자의 가슴에 침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방치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법원은 주치의와 병원 원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했

광주지법 민사14단독(판사 최윤중)은 A씨가 한 방병원 주치의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손해배상액으로 31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주치의와 원장이 공동해 200만원을 지급 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1월 28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 달부터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 료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인 이 병원 부원장은 2월 9일 낮 12시께 병원 3층 치료실에서 A씨의 가슴에 침을 놨다. 치료를 마친 후 침을 제거해야 했지만 이날 오후 1시 40분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빼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뺐다"고만 말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됐다.

4층 병실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갑자기

심장에 심한 통증과 함께 마비증상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이에 A씨는 "통증이 발생하고 몸무게가 8kg 가량 빠질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 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치의가 침을 빼지 않아 원고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시킨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A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통증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병원장은 주치의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진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 설명했나.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빛고을장학생 수혜자·장학금 대폭 확대

광주시는 "빛고을장학생의 선발 대상과 지급 액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재) 빛고을장학재단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전부 개정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학생 대상은 ▲국내 이주로 인한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 ▲ 보호조치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의인 및 선행 등으로 광주시 명예를 선양한 학생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체육분야 장학생 선발 대상을 기존의 고등

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선발기준도 전국체육대회 입상자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장학생 확대 대상은 올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평균 45% 증액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이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43% 증가), 고등학생은 50만원에서 80만원(60% 증가), 대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33%증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 장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